

광주특별시, 시민 삶·지역 미래 바꿀 입법과제 총력 대응

메가특구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 관리
발의부터 시행까지 대응…정부부처·국회 등과 협력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43건의 입법과제 대응에 나섰다.

광주특별시는 18일 3개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 광주특별시 관련 법률은 8대 분야 43건이다.

발의 단계부터 국회 심의·의결, 법률 시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법안으로 보고, 전남광주특별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발의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에도 기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특례와 광주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해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오는 12월17일 시행 예정인 영농형 태양광 지원 특별법 등 9건은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꼼꼼히 살피고, 미비한 부분은 향후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국회 계류 중인 ‘광주공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등 30건은 법안별 계류 원인을 분석하고, 발의의원과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통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8일 3개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특별법’(RE100 특별법)은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

별법의 조문과 특례를 충실히 숙지해 국비 지원과 공모사업 건의시 적극 활용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특례는 시행령이나 관계부처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은 입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발의 단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장과 요청사항이 반영되도록 관심갖고 계류 중인 법률은 부처와 상임위를 방문해 조속히 심의가 이뤄지도록 지속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입법과제를 추가 발굴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먼저 제안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특별시는 정책기획관실을 입법 대응 총괄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 43개 법안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주당 사무총장에 한정에…정책위의장에 권칠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신정훈·대변인 조계원 임명

■ 김민석호 인선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신임 사무총장에 한정에(4선·서울 강서병)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대표의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한 사무총장은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해당 직책을 수행 중이고, 권 정책위의장은 문제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에는 정당대회 기간 국산한 경쟁에 따른 당내 분열상을 수습하기 위한 탕평 인사의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능력을 우선한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오랫동안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당 살림을 책임질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1기 지도부 시절인 2023년 3월부터 1년 간 당 수석대변인을 지내는 등 비교적 계파 색깔이 얇은 인사로 분류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 정책위의장에 대해

“중기부 장관을 지내면서 현재 필요한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콘텐트를 갖고,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홍보위원장에 김남준(조선·인천 계양을)의원을,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에 신정훈(3선·전남 나주 화순)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조계원(조선·전남 여수을), 이응우(조선·인천 서구을)의원과 신현영 전 의원이 임명됐다.

신설되는 ‘민주당 TV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한운현 전 민주당 홍보위원장이 맡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텔리민주’라는



한정애

권칠승



신정훈

조계원

민주당 소통 플랫폼이 있었는데 김 대표는 국민과 당원께 신속한 정보를 전할 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민주당 TV’를 개국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李대통령 “특정 지역 비하 제재 있어야”

‘정치인 때문에 혐오 확산’ 지적 공감…“적대 문화 완화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

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극우 성향 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포럼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참여해 ‘호남 5·18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의적으로는 고립시켜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여론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우파 단체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측에 국회의원직 사퇴와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공개질 의서를 전달했다.

기념사업회는 이 의원실 관계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뒤 이 의원을 향해 “국회의 직인과 공공 자산을 역사 왜곡에 악용한 죄를 인정하고 제명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민석 승리 도운 호남 인사들 지도부 발탁될까

■ 8·17 전대 당대표선거

호남의 결정적 지지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의 새 사령탑이 된 김민석 대표가 그를 도운 호남 출신 인사들을 첫 선에서 배려할지 관심이 쏠린다.

8·17 정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당선된 배경에는 호남 출신 의원들과 원외인사들의 든든한 지원이 큰 힘이 됐다. 특히 호남지역 순회경선에서 드러난 김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호남 지역민들의 성원이 결집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앞장서서 지역 여론을 이끈 성과를 간과하기 어렵다.

당대표 경선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다수가 김 대표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 표명했고, 일부는 자신의 선거처럼 물신양면으로 지원사격을 펼쳤다. 반면 정청래 전 당대표와 송영길 의원 지지자가 소수에 불과했다.

이런 호남의 지지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관지어 폄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단순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김 대표 지지와 연결하는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지지’ 이끈 공로 적지않아…첫 인선에 촉각
능력 따라 ‘안배’ 전망…계파 갈등에 탕평인사 거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 표를 던진 호남 지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고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청와대와 여당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그동안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던 정 전 대표보다는 김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는다.

김 대표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는 우선 김민석 후보 캠프를 총괄 지휘해 온 김원이 의원(목포·재선)을 빼놓을 수 없다.

일찌감치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당시 수행 중이던 전남도당위원장직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사퇴했다.

지난달 6일 김 대표의 공식 출마선언에는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정진욱(광주특별시 동남갑)·조계원(여수을) 의원 등이 함께했고, 이들은 당대표 경선기간 SNS를 통해 김 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영암이 고향인 이진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진병계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

섰다가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뒤 김 대표를 도왔다.

박지원 의원도 SNS를 통해 김 대표를 옹호했고,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수차례 밝히며 김 대표의 당선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오성 전 의원도 공개적으로 김 대표를 지지 선언하고 지원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 후보 지지자들을 모아 ‘전남광주 당원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행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당원·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전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위원회에 당선된 안도걸 의원(동남을)은 자신의 선거운동 중에도 김 대표가 광주특별시를 방문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함께하며 당원들에게 김 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를 지원하다가 정청래 후보 측으로부터 ‘불법 전화방 운영’이라고 공격을 받은 전진숙 의원(북구을)은 “기획형 한정 취조이자 정치공작”이라

며 즉각 대응했다. 자칫 잡음을 키울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가 새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지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천혁신·통합·청년·양극화·당원주권·지방성장 등 앞으로 당의 주축이 될 6~7대 가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들 가구를 누구에게 맡길지 주목된다.

김원이 의원과 함께 정진욱·김문수·이진태 의원 등도 주요 당직에 발탁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8일 신정훈 의원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에, 조계원 의원은 대변인에 임명됐다.

역대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호남 인사가 배려됐지만 이번엔 호남 출신인 박선원·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대표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발족하겠다고 밝힌 공천혁신기구에 참여 호남대표 인사를 호남언론들에게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친분이나 계파보다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대로 역량 있는 인사를 당직에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전대에서 계파간 갈등이 높았기에 일부 탕평인사도 거론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도 당도 올바른 노선을 택한 뒤 그에 걸맞은 역량 있는 분들을 찾으면 된다”며 “계파를 따지겠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순천대·목포대 각각 의대·종합병원 설립”

진보당, 전남 동·서부 의료공백 해소 위한 정부 결단 촉구

진보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서부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 각각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김중훈 대표와 전종득 국회의원, 김주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위원장, 이성수 전 전남도당위원장 등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정 진료료를 떠나는 지역 의료현실을 개선하려면 의대 1곳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면 양 지역에 각각 의대와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 2곳을 각각 신설하고 대학병원도 동·서부권에 각각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병원은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지역 의료 불균형은 한 지역의 불편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생명권의 문제”라며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투자”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전남광주지역 응급환자와 중증질환자들이 수도권과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실을 거론하며 동·서부권에 각각 의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과정에서 거론된 전남대병원 여수 분원 설립이 장기간 실현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 계획과 법적·행정적 문서에 순천대와 목포대의 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